

## 함재봉, 『한국사람 만들기 2』에 대한 서평문

2018. 7. 18 허동현(경희대)

### 1. 총평

저자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은 미국에서 고교를 나와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치외교사학자다. 특히 연대 정외과 교수(1992-2005), UNESCO 사회과학국장(2003-2005), USC 한국학연구소 소장(2005-2007), RAND 연구소 선임정치학자(2007-2010) 등을 역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비교사·국제사적 시야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조망할 수 있는 학적 기반을 가진 독보적 연구자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낸 의미의 망(거미줄) 위에 얽혀 있는 동물이다.” 함 원장은 미국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품게 된 “한국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풀기 위해 문화인류학자 크리퍼드 기어츠의 방법론을 빌려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친 ‘의미의 망’ 즉 ‘담론의 틀’을 이상형(ideal typus) 다섯 개(친중위정척사파,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 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의 그것으로 압축했다. 즉 이들이 펼친 ‘담론의 틀’을 이해하는 것이 아직 진행 중인 ‘한국 사람’ 탄생 과정을 究明하는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어츠가 말하는 “두터운 묘사(thick description)”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그는 1권에서 다룬 ‘친중위정척사파’ 형성의 계보학을 설명하기 위해 조선 사람들의 중국 인식, 당시 중국역사의 전개, 중국인의 조선관은 물론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정책도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마찬가지로 이 책 2권에서도 ‘친일개화파’의 계보나 일본인식만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오히려 ‘친일개화파’가 모델로 삼은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입체적으로 ‘두텁게’ 묘사하는데 지면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바로 이 점에서 함 원장이 기획한 앞으로 나올 3권을 포함한 5권의 連作은 국사학계의 一國史的 內在的 發展論에 대한 비교사·국제사적 반론의 성격을 띠는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친일개화파’를 다룬 이 책 『한국 사람 만들기 2』의 학설사적 의미는 메이지유신을 통한 근대일본의 부상과정을 입체적으로 묘사하는데 활용한 2차 자료가 대부분 미국 등 서구학계가 거둔 성과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종래 일본학계의 연구에만 의존해 온 우리 학계의 單眼的 메이지 일본 이해에 균형을 잡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sup>1)</sup> 아울러 수월하게 읽히는 유려한 문체와 독자의 이해를 돕

1) 일본 주류사학자들이 일본근대사 서술에서 ‘농민들의 이데올로기적 한계성’을 지적하지만, 한국 근대사의 진로는 일본과 다른 ‘제3의 길’ 즉 ‘동학농민전쟁’과 같은 농민적 근대의 실현에 있다고 보는 이

는 풍부한 사진과 그림 자료도 이 책의 두드러진 장점이다. 굳이 쯔의 티를 꼽자면, 메이지 일본을 모델로 한국 사람을 만들려 한 ‘친일개화파’를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그친 것이 다소 아쉽다. 사실 일본을 모델로 한 한국사람 만들기는 ‘3일천하’에 그친 갑신정변(1884) 보다 갑오경장(1894-1895)에서 본격화 한다. 따라서 군국기무처의 개혁이나 갑신정변이 참여하지 않은 유길준·어윤중 등 ‘甲午改革派’의 계보학도 서술되었다면 책의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한다.

## 2. 근·현대 문명전환 주체를 둘러싼 배타적 논쟁에 대한 경종

함 원장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국사학계의 철옹성 같은 통념 內發論만은 아니다. 이 연작의 학문적 중요성은 근대로의 문명전환을 이끌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놓고 1970년대 이래 현재까지 진행 중인, 다른 시각과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 학계의 배타적 논쟁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논쟁의 흐름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이후 국사학계는 1970년대까지는 문명의 준거(정체성의 완성)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한 국민국가의 수립에 두고 그 주체로 민족을 呼名했지만, 1980년대 이후 민족을 단위로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완성을 문명의 전환으로 보는 민족·민중주의사자들이 등장하면서 종래의 우파 민족주의 사관은 퇴색하고 말았다. 실존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쇠퇴한 200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서양사학계가 민족과 계급(민중) 같은 거대담론에 의한 역사 專有를 비판하며 젠더(성차)·인종·지역·계층·세대를 아우르는 다원적 개체들을 문명전환의 역사주체로 호명했다. 절대화 되었던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로 근대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탈민족·탈근대 담론의 등장에 힘입은 新우파 경제성장사학자들은 민족의 허구성을 지목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립, 즉 문명전환에 성공한 역사로 보아 이를 이끌어 낸 이들을 그 주체로 지목했다. 또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함께 세계적으로 帝王에 대한 향수가 일어나자, 문명전환의 주체가 제왕이었다고 보는 학설도 대두되었다. 국사학계의 주류인 민족·민중주의사자들은 민족을 단위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경제성장사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의 수립을, 그리고 탈근대·탈민족 담론을 설파하는 서양사학자들은 민족과 국경을 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을 문명의 완성으로 본다. 또한 그 주제에 대해서도 국사학계는 민중과 왕실을, 경제성장사학계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지도자들을, 서양사학계는 복수의 개별주체들을 호명한다.

유럽연합(EU)을 준거로 동아시아공동체를 이뤄야 할 문명의 전범으로 보았던 탈민

---

면에는 자국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서술자의 현재적 욕망, 즉 ‘계급혁명’의 실현이라는 꿈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박노자, 「내가 동학을 사랑하는 방법」, 『당대비판』25, 2004, pp. 76~82.

족·탈근대 역사학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와 일본과 중국에서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강화라는 역풍을 맞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건국절 논란이 촉발한 기억전쟁이 잘 말해주듯이, 이룩해야 할 문명의 전범과 그 주체를 둘러싼 민족·민중주의사관과 근왕주의사관, 그리고 역사수정주의 경제성장사관 사이의 간극은 좁혀질 기미가 없다.<sup>2)</sup> 이러한 배타적 문명관과 충돌하는 역사 인식은 기억의 내전이 계속되는 모멘텀(Momentum)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탈근대·탈민족주의사학, 민족·민중주의사학, 근왕주의사학, 역사수정주의 경제성장사학 등 전근대와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동시에 혼재하는 한국 역사학계의 “비동시성의 동시성(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temporary)”은 지체와 조속이 함께하는 한국사회의 현재를 반영한다. 해방 직후 마르크스 유물사학자들이 민족을 피지배계급과 지배계급으로 양분한 것은 오늘의 민족·민중주의사학자들이 취하는 이분법의 기원을 이루며, 대안담론으로서 역사수정주의 경제성장사학자들도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을 양분하고, 민족을 국민과 인민으로 가른다는 점에서 동일한 우(愚)를 범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함 원장의 연작이 갖는 학문적 의미가 있다.

이 책의 목적은 ‘한국 사람’의 ‘변치 않는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한두 가지의 변치 않는 ‘본질’에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형성하는 담론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동시에 한국 사람을 형성하는 담론을 만들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더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한국 사람 만들기』1, pp. 20, 23).

그는 ‘한국 사람 만들기’ 시리즈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한 5개 이상형(친중 위정척사파,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 공산주의파, 인종적 민족주의파)의 ‘담론의 틀’을 추적하지만, 어느 하나를 特定해서 정체성 형성, 문명전환의 주체로 절대시하거나 규정하려 하지 않는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같이 한국 사람의 정체성도 불변이 아니라 여전히 만들어 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그의 열린 시각은 한국 학계의 배타적 연구 경향에 경종을 울리는 頂門一鍼이다.

### 3. 愚問

토론자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지엽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점이 두렵지만 다음을 묻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짐을 벗고자 한다.

2) 김용섭, 『농업으로 보는 한국통사』, 지식산업사, 2017; 안병직, 『경제유표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17. 한영우, 『미래를 여는 우리 근현대사』, 경세원, 2016; 줄고, 「한국 근·현대 문명전환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管見」, 『송실사학』39, 2017.

첫째, 본서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갑신정변 발발 이전에는 同病相憐의 순수한 호의로 한국의 독립을 지원했다고 보았는데,<sup>3)</sup> 이는 후쿠자와가 1881년에 이미 팽창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최근 연구와 충돌한다.<sup>4)</sup> 후쿠자와의 한국 독립에 대한 지원과 연민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문이다.

둘째, “‘친일개화파’가 일본으로부터 배운 것은 근대산업, 군사, 교육, 법뿐만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개념”이라는 분석과 그 독립이 일본이 아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정곡을 찌르는 지적에 공감한다.<sup>5)</sup> 갑신정변 실패 후 10년간 우리의 독립을 막은 한 세기 전 청국처럼 大國崛起를 외치며 중국이 패권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재를 고려하면, 갑신정변의 역사적 의미는 근대 최초의 ‘抗淸 독립운동’으로, 그리고 ‘친일개화파’는 ‘항청 독립운동가’(항일독립운동의 대척점에 서있는)로 다시 ‘命名(naming)’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賢答을 구하는 두 번째 우문이다.

‘친미개화파’를 다룬 3권의 속간을 고대하며 이상에 대한 고견을 구하는 것으로 부족하나마 약정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

3) “18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후쿠자와의 자유 민주주의는 다른 일본 정치인들의 자유 민권주의와 구별되는 것이었다. 후쿠자와가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조선에 갓 태동한 개화파에 대해 동병상련을 느낀 동시에 조선의 개화와 자유화를 돕는 것이 일본의 자유 민권 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 만들기』2, pp. 397-398.

4) “후쿠자와는 1881년 10월 『時事小言』의 발표를 기점으로 서양열강에 대항하기 위해선 일본이 무력을 써서라도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는 팽창주의 노선으로 선회했다.” 김종학,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일조각, 2017, pp. 140-141

5) “‘친일개화파’가 일본으로부터 배운 것은 근대산업, 군사, 교육, 법뿐만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개념이었다.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은 서대문의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문으로 오해하고 있다. …만일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문이었다면 1897년에 지어진 독립문을 일제가 일제 시대 내내 그대로 두었을 리 만무하다.” 『한국 사람 만들기』2, pp. 11, 438.